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수 신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발 신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담당: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
 02-723-5056, welfare@pspd.org)
제 목 [보도자료]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개최
날 짜 2024. 07. 02. (총 8 쪽)

보 도 자 료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해 사회서비스원법 개정하라!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및 활성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1.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는 오늘(7/2) 오후 2시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와 활성화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의 개정안을 발의하고, 법 개정을 촉구했다.
2. 저출생·고령화 사회의 도래, 여성 경제활동 및 맞벌이 가구의 증가 등 사회구조 변화에 따라 아동·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돌봄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뢰할 수 있는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열악한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 법률인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치 권력 교체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이 정치적 판단에 의해 폐지되거나 통폐합이 시도되는 등 돌봄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서비스원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국고 보조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지역별 운영의 격차가 생겨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예산 부족으로 초단기간 저임금 노동 환경을 초래하는 등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부터 서울시민의 돌봄을 책임져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 4월 26일 서울시의회에서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고, 서울시가 해당 조례를 공포함으로써 폐원이 결정되었다.
3.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보완·강화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법안 취지를 밝히고, 법 개정사항에 대해

소개했다. 법 개정안에는 시·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의무화 조항, 신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조항, 국가 혹은 지자체가 사회서비스원의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조항,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주체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4. 참여연대 김진석 공동집행위원장은 “돌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사회가 20년 가까이 논의해온 결과물인 사회서비스원이 윤석열 정부의 탄생, 일부 지자체의 정치 권력 교체와 더불어 가시밭길을 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폐원 절차에 접어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도 “사실상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인 방조 아래 대한민국 공공돌봄의 시계는 멈추었다”고 지적했다. 김진석 집행위원장은 “오늘 발의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꼭 필요한 개정안”이라며 “국회가 나서서 멈춰 서버린 공공돌봄의 시계를 다시 돌릴 때”라고 강조했다.
5.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은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좋은 공공돌봄을 제공해온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국민의힘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의 왜곡과 거짓 주장에 의해 폐원되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사회공공성에 대한 대통령의 비뚤어진 가치관이 자리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성규 부위원장은 “이번에 발의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화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6. 한국노총 류제강 정책2본부장은 “돌봄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제강 본부장은 지난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서도 돌봄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돌봄노동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는 점, 돌봄 정책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중요 역할에 대해 노사정 위원들이 공감했다고 밝히고, 우리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과 돌봄 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활동가들 역시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법 개정을 촉구했다. 끝.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돌봄 공공성 강화 위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7월 2일(화) 오후 2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공동주최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 돌봄공공성 확보와 돌봄권 실현을 위한 시민연대
- 프로그램(안)
 - 참석자 소개 및 발언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발언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김진석** 서울여대 교수,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 붙임자료1_ 기자회견문

▣ 붙임자료2_ 참가자 발언문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자료1_남인순 의원 기자회견문

돌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 설치 의무화 및 활성화의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을 오늘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및 투명성을 향상하고 돌봄 종사자들의 일자리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10여 년에 걸쳐 오랜 기간 동안 사회복지계, 학계 및 노동시민사회계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논의하여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제가 지난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서비스원법」을 대표발의한 끝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힘겹게 통과시킨 제정법률입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걸음마를 채 떼기도 전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설립한 사회서비스원을 전임 정부가 추진하였다는 이유로, 정치적 판단에 의하여 무분별하게 폐지하거나 통폐합시켜 법률의 제정 취지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대구·울산·충남 등의 지자체에서는 사회서비스원을 타 기관과 통폐합시켰고, 서울시는 폐지를 진행하는 등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대부분을 절대적으로 민간에 의존하고 있으며 국가나 지자체가 설립한 기관들도 대부분 민간에 위탁운영하고 있어 사실상 공공에서 직영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공적 돌봄을 국가가 조금씩이라도 확충해나가기 위해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었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가가 발 벗고 나서서 무너뜨리고 있어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한 논의 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측의 반대로 반영하지 못한 사항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후퇴되었던 조항을 다시 반영하여, 돌봄의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시작된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며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본 개정안은 ①시도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의무화하며, ②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우선 위탁, ③사업 수행에 필요한 국고 보조, ④시군구 사회서비스원 설립 운영 근거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첫째, 시·도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의무적으로 설립·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임의조항으로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의해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서울시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 5년도 채 되지 않은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폐지하려 하고 있으며, 그 결과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회서비스원을 전달체계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사업들이 서울시와 같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임의조항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 둘째, 신규로 설립하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을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민간이 참여하기 어렵거나 공급이 부족한 분야, 혹은 위법행위로 인해 문제가 있는 기관에 한해서만 우선위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렇다 보니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목표와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가나 지자체가 신규로 설립하는 제공기관에 한해서는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셋째,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과 달리 영리를 목적으로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기관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공공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은 필수적입니다. 이에 설립 운영 외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추가 경비에 대한 국고 보조의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 넷째, 시군구에서 지역의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돌봄과 같은 사회서비스의 계획 실행이 실제로는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초자치단체 중 역량과 의지가 있는 곳에서도 기초 단위의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시군구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을 마주하기 전까지 전 생애과정에서 누군가의 돌봄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국민은 돌봄이 필요할 때 누구나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 국가는 차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안정된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윤을 우선시하는 민간 중심 복지 체제가 아닌, 민간에서 기피하는 영역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각별한 의지로 시작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영역의 민간 의존성을 극복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어느 때 보다 돌봄의 국가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재, 제22대 국회에서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회서비스원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석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사회서비스원 정책의 시계가 돌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사회서비스원 관련 연구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원의 아이디어가 한국 사회 정책 논의의 장에 등장한 2006년으로부터 2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논의의 흐름에는 여러 정치세력을 대변하는 정당들뿐만 아니라, 사회정책 관련 학계와 현장의 전문가, 사회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 단체, 그리고 시민운동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 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으며, 그 지난한 협의와 조정의 결과로 비로소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탄생한 것입니다. 수많은 관련자가 오랜 논의를 거쳐 힘들게 만들어낸 사회서비스원은 그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탄생, 그리고 일부 지자체의 정치권력 교체와 더불어 사회서비스원 정책이 추구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의 흐름은 가시밭길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6일 서울시 의회가 통과시킨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조례안을 이후 오세훈 시장이 시행을 공포함으로써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폐원 절차에 접어들었습니다. 4월 26일부로 천만 인구 서울시 공공 돌봄의 시계는 멈추었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도, 사회보장위원회, 주민 모두의 존엄한 일상과 행복권 실현의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대통령과 정부의 적극적 방조 아래 대한민국 공공 돌봄의 시계는 멈추었습니다.

모두가 돌봄의 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년이면 전체 인구 기준으로 5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이르고, 당장 올해 말까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천만 명에 이를 정도로 노인인구 증가율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돌봄의 위기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당연히 돌봄과 의료의 측면에서 사회적 부담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우리가 얘기하는 돌봄의 위기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바닥을 향한 끝 모를 질주를 하는 출생률은 어떠합니까? 저명한 페미니스트 경제학자인 낸시 폴브레조차 한국 젊은 여성들의 “출산파업”이라고 명명할 정도로 조건이 열악한 돌봄 노동, 그리고 그로 인해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제약을 받는 현재의 돌봄 위기가 불러온 직접적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이 돌봄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우리 사회가 20년 가까이 논의해 온 결과물입니다.

현재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운영의 근거법인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 및 투명성 제고 등 사회서비스를 강화하고,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 및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의되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은 현행 사회서비스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지금 꼭 필요한

한 걸음을 내딛는 개정안입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국회가 나서서 멈춰 서버린 대한민국 공공 책임 돌봄의 시계를 다시 돌릴 때입니다.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먼저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신 남인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한국사회의 공공성은 윤석열 정권에 의해 파산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처할것이라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의 돌봄은 오랜 세월 이윤을 최우선시하는 민간에게 맡겨져 운영되면서 불법, 편법의 문제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윤 극대화를 위해 돌봄 노동자들의 처우는 더욱 열악해졌고 이는 안정적이고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환경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안정적이고 질높은 돌봄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제공하는 공공돌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였고, 현재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사회서비스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제정된 법률은 여야의 정치적 이해가 반영된 절충안으로 통과되면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적 약자를 국가가 돌봐야 한다는 취지에서 설립되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 중 하나인 서울사회서비스원도 2019년 3월에 출범해서 노동자들을 직고용해 노인과 장애인, 영유아들에게 안정적이고 질좋은 공공돌봄을 제공해 왔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노동자들은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긴급 돌봄을 제공하며 돌봄 공백을 해소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종합재가센터를 중심으로 민간이 기피하는 돌봄 SOS, 중증돌봄 등은 사회적으로 아주 높은 평가를 받았고 이는 공공돌봄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확인시켰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힘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은 서사원이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다, 돈먹는 하마다라는 왜곡과 거짓 주장을 앞세워 지난 5/22일 서울사회서비스원을 폐지시켰습니다.

이러한 결정의 배경에는 사회공공성에 대한 대통령의 비뚤어진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5/31일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사회보장서비스도 시장화되고 산업화되어 경쟁체제가 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성장동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후 대통령의 주장은 정부 여당을 통해 작동되었고 급기야 서사원 폐지로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한사람의 비뚤어진 가치관으로 인해 민생과 직결된 사회공공성이 무너지는 것은 결단코 안될 일입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공공성 훼손에 맞서 더욱 강력하게 저항하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인순 의원께서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법률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화 되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민주노총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제강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

한국사회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동인구는 감소하고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지난해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근거하여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은 아이, 어르신,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국가의 재정으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정책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러한 복지정책에 국가의 재정은 투입되지만 공급에 있어서는 여전히 민간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급에서 파생되는 돌봄서비스의 질 저하,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오랜 시간동안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해 왔고 그 결과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률 제정 과정에서는 당초의 안이 후퇴되었습니다. 정권이 바뀐 후에는 현 정부가 사회서비스의 시장화를 추구하면서 예산을 이유로 많은 지자체에서 사회서비스원 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수순을 밟기도 했습니다. 강조하건데, 돌봄노동은 상품이 아니라 사람을 돌보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 공공성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돌봄의 중요성은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 112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일반토의위원회에서는 양질의 일자리와 돌봄경제에 대한 보고서를 논의·채택했습니다. 노사정 위원들은 돌봄 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돌봄노동자들은 양질의 일자리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또한 돌봄정책에서 국가가 취해야 할 중요 역할에 대해서도 공유했습니다.

우리도 사회서비스원의 기능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대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돌봄의 전문성·투명성을 제고하도록 서비스와 인력의 기준을 세워 민간영역을 견인하고 것을 포함합니다. 지금의 사회서비스원법으로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법안을 정비해야 합니다.

오늘 남인순 의원이 법안을 발의합니다. 한국노총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또한 돌봄 정책이 더 큰 영역에서 공공성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